

북한 2009년 화폐 개혁 3년 평가

이 용 화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북한 정권 수립 이후 5번째로 화폐 개혁을 실시했다. 북한이 화폐 개혁을 실시한 배경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재정 악화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체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 권력승계와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시장 통제와 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던 시점이었다.

북한의 5차 화폐 개혁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외화선호도 심화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재정수입 확충과 국가주도의 경제운영 강화, 이를 통한 각종 경제 관련 법령 재정비와 개방 확대 여건 조성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부정적 평가로는 첫째, 인플레이션 지속을 들 수 있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물가는 화폐 개혁 2년 만인 2011년 12월 경 화폐 개혁 이전의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2012년 10월 기준 환율과 쌀값 등은 화폐 개혁 직후에 비해 200~300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둘째, 외화 선호도 심화를 들 수 있다. 화폐 개혁 이후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라 외화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고, 종합시장의 대중의존도 상승에 따라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 평가로는 첫째, 재정수입 확충을 들 수 있다. 화폐 개혁 이후 외화사용 금지 및 구 화폐 회수로 2009년 36.6억 달러에서 2011년 58.4억 달러로 재정이 증가되었다. 둘째, 대내적으로 경제조직 및 법제 정비가 실시된 점이다. 경제운영 중심이 2009년 화폐 개혁을 주도한 군부는 퇴진하고 내각으로 이관되어 내부 경제개선 추동력이 증대되었다. 또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및 황금평경제지대법 등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법제가 집중적으로 제·개정되었다. 셋째, 대외적으로 개방 확대가 가속화된 점이다. 라선·황금평 지구 등 중국과의 특구공동개발, 외자유치와 북·중 무역 확대 등 개방 노력이 증가하였다.

북한은 5차 화폐 개혁 이후 공급 능력 확충을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 외자유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개혁·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속도와 폭은 북한 경제 상황과 남북관계, 국제사회 여건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남·북·중의 나선·황금평 개발과 남·북·러의 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 추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 5차 화폐 개혁의 배경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복원과 김정은 제1비서 후계체제 안정화를 위해 화폐 개혁을 전격 단행한 바 있다. 2009년 화폐 개혁은 북한 정권 수립 후 5번째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과 내각 결정¹⁰⁾을 통해 실시됐고, 화폐 교환 기간은 1주일로(2009. 12. 2 ~ 6), 2009년 12월 7일부터 신권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5차 화폐 개혁의 배경은 크게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고난의 시기 전후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재정 악화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체제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주요 생필품 가격은 40~50배나 급등하였고, 2002년 7.1 조치 이후 주민들의 사적 시장 활동이 확대되면서, 국영 기업 및 상점에서의 화폐 유통과 공공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후계 체제 구축과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시장 통제와 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이었다. 7.1조치 이후 시장 활동과 부정·부패를 통해 부를 축적한 정치·경제 세력이 확산되고 북한 내부에 외화 사용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북한의 2009년 화폐 개혁은 북한 정권 수립 후 5번째로, 시장 통제 및 경제 부패 세력 척결을 위해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화폐 개혁과 차별화된다고 평가될 수 있다.

1차 화폐 개혁(1947. 12)은 일제 및 소련 군정하의 화폐제도의 부작용 청산, 새로운 사회주의적 화폐 제도 확립 지향 목적에서 구권과 신권의 1 : 1 비율로 교환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었다. 2차 화폐 개혁(1959. 12)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플

10) 북한 당국은 화폐 교환에 대한 결정 423호를 하달하였음. (423-1호: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423-2호: '경제관리체제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레 방지 및 새로운 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구화폐 100원 : 신화폐 1원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3차 화폐 개혁(1979. 4)은 유티 화폐 회수, 경제 건설 자금 확보를 위해 금액의 제한 없이 1 : 1 비율로 교환하였다. 4차 화폐 개혁(1992. 7)은 화폐 제도의 공고화, 화폐 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신·구권을 1:1의 비율로 교환하되, 교환 한도를 정해두었다.

〈북한의 화폐 개혁 연혁〉

구 분	시 기	내 용
1차 화폐 개혁	1947.12 (교환 기간 : 12. 6~12)	- 목적 : 과거 일제 및 소군정하의 화폐제도의 부작용 청산, 새로운 사회주의적 화폐 제도 확립 지향 - 「북조선중앙은행권」의 신권과 1 : 1 비율로 교환 * 북조선인민위원회 법령 제30호에 근거
2차 화폐 개혁	1959. 2 (교환 기간 : 2.13~17)	- 목적 :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 방지, 새로운 재정금융 토대 구축 및 새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투자 자원 확보 - 구화폐 100원 : 신화폐 1원 비율로 교환 * 내각결정 11호「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데 대하여」근거
3차 화폐 개혁	1979. 4 (교환 기간 : 4. 7~12)	- 목적 : 유티 화폐 회수, 경제 건설 자금 확보 - 금액의 제한 없이 1 : 1 비율로 교환 - 교환한도를 두지는 않았으나 저금을 적극 권장·강제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근거
4차 화폐 개혁	1992. 7 (교환 기간 : 7.15~20)	- 목적 : 화폐 제도의 공고화, 화폐 유통의 원활화 - 신·구권 교환비율은 1:1 - 교환 한도 : 가구당 399원,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 후 지불하도록 하고, 3만원 이상은 저금마져 불허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근거
5차 화폐 개혁	2009.11 (교환 기간 : 11.30~12. 6)	- 목적 : 경제 부패 척결, 체제 공고화, 인플레이 방지 - 신·구권 교환 비율 : 100원 : 1 - 교환 한도 :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50만원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과 내각결정 423호 근거

자료 : 통일연구원, 『2009 북한 개요』, p. 237 및 이영훈, 「북한의 화폐경제 : 이행과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통일연구원, 2006. pp. 111~121 참조 보완.

주 : 현대경제연구원 미 발간 보고서 참조.

북한 5차 화폐 개혁의 주요특징과 목적

2009년 북한의 5차 화폐 개혁의 주요 특징은 교환 비율의 차별, 교환 한도의 설정,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교환 비율 차별의 경우 현금은 100 : 1이나, 저금소의 저축은 10 : 1로 교환함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저축을 시중 유통 현금보다 합법 자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상품 가격은 2002년 7.1 조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물가 안정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상한 금액 설정은 가구당 10만원에 1인당 5만원씩 추가 교환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구 화폐는 1,000 : 1의 비율로 무제한 교환해주어 예금을 들게 한 조치이다. 화폐 교환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강제 저축'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자본을 축적한 주민 자금을 회수하고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 확산으로 가구당 10만원의 교환 한도를 이후 50만원으로 상한선을 조정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내·외국인 차별의 경우 북한 내 외국 기업과, 북한과 교역하고 있는 중국인 등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교환 한도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조치가 특징이다. 이는 5차 화폐 개혁 조치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개혁임을 시사하며, 화폐 개혁으로 인해 대외 무역에서의 부정적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북한의 5차 화폐 개혁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교환 비율 차별	- 현금은 100 : 1, 저금소 저축은 10 : 1
교환 한도 설정	- 당초에는 가구당 10만 원 → 1인당 50만원까지 확대
내·외국인 차별	-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해 교환 한도와 기간 제한두지 않음
화폐 개혁과 함께 시행된 조치들	- 종합시장 폐쇄 : 농민시장으로 강제 전환 • 상인보유 물자, 화폐 모두 국영상점으로 이관 및 국가에 납부 - 외화사용 금지 • 개인의 외화 상거래 불법, 보유외화 모두 국가에 헌납 - 노동자·농민의 임금 이전대로 지불 • 1인당 500원 배려금 지불, 농가 가구당 15만원 현금 분배

자료 : 통일연구원, 『2012 북한 개요』, p. 170 참조 보완.

화폐 개혁의 목적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정 확충과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체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5차 화폐 개혁은 표면적으로 볼 때, 시중의 과잉 화폐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7.1 조치 이후의 종합시장 확대와 국영상점과 기업소의 화폐 환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화폐가 비공식 부문이나 개인에게 집중된 바 있다. 특히 현금과 저축의 교환 비율을 차별화하는 것은 저금소의 저축을 시중의 보유 및 유통 현금보다 합법 자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상품의 국정 가격을 화폐 교환 비율 100 : 1로 축소하는 것은, 물가를 2002년 7.1 조치 이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의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전후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국가 재정 능력 회복과 2012년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 개발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시중 유동성을 국가로 환수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이나 개인에게 집중된 자금을 공적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이며, 특히 신권 교환 상한선의 설정은 화폐 개혁을 통해 강제 저축을 유도하는 동시에, 발권을 통해 민간의 유동성을 국가 재정으로 환수코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 당국의 국가 경제 장악력과 계획경제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시장 활동과 부정부패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정치·경제 세력을 단속하여 국가주도의 공공경제 정상화를 추구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이는 2002년 7.1 조치 이후 시장 활동과 부정부패를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 세력을 단속하는 한편, 확충된 경제 권력을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계승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9년 화폐 개혁의 경우, 현금은 100 : 1, 저금소 저축은 10 : 1로 교환 비율에 차별을 둔 것은 시중의 불법적 자금 유통에 대한 제재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5차 화폐 개혁 3년 평가

북한의 5차 화폐 개혁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외화선호도 심화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재정수입의 확충, 각종 경제 관련 법령 재정비와 개방 확대 여건 조성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부정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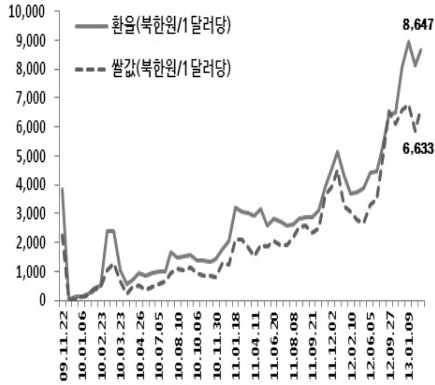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부정적 평가로 볼 수 있다. 화폐 개혁 2년 만인 2011년 12월 경 북한의 인플레이션은 화폐 개혁 이전의 상황으로 악화되었고, 특히 2012~2013년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었다.

쌀값의 경우 2009년 11월 30일 화폐 개혁 직후인 12월 kg당 20원에서 2012년 10월 기준 6,100원으로 급등하여, 3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가계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쌀 가격은 2009년 화폐 개혁을 거치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환율 변동, 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상품 유통의 위축으로 인플레이션이 점차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환율 또한 2009년 12월 달러당 30원 수준에서 2012년 10월 기준 6,400원에 달해 200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북한의 화폐 가치를 반영하는 시장 환율 역시 쌀 가격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북한 당국은 화폐 개혁 실시 이후 외화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나, 환율이 지속적으로 급등하자 3개월 만인 2010년 2월 외화사용을 전면 허용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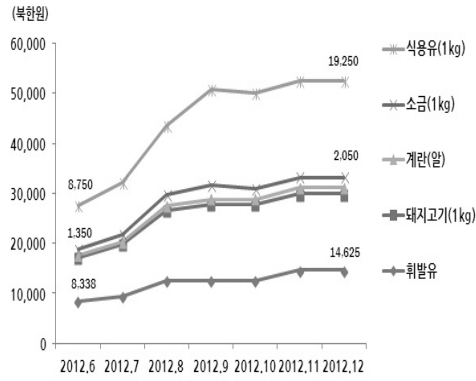
쌀값과 환율뿐 아니라 현재 북한의 기타 시장물가 현황도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화폐 개혁으로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100배 상승했지만, 시장물가가 200~300배 가까이 올라 북한 주민들의 실질 소득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화폐 개혁 이후 시장 환율 및 쌀값 변화〉



자료 : 데일리 NK
주 : 평양, 신의주, 혜산의 평균

〈최근 북한 시장물가 현황〉



자료 : NK 지식인연대
주 : 평양, 평성, 원산, 혜산의 평균

두 번째 부정적 평가로, 화폐 개혁 이후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른 외화에 대한 선호도 증가를 들 수 있다.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불안정한 북한 화폐 보다는 달러나 위안화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외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9년 화폐 개혁은 시장 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북한 원화로 보유하고 있던 상인 및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 바 있다¹¹⁾.

특히 화폐 개혁 이후 종합시장의 대중의존도 상승에 따라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중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북한 원화를 대신해 결제수단으로서의 위안화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¹²⁾. 이에 따라 위안화에 대한 환율도 크게 상승하여 2010년 10월 230원에서 2011년 10월 500원, 2012년 10월 1,000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1,3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베이징 투자설명회를 통해 라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에서 양국화폐(중국 위안화, 북한원)가 공식 통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¹³⁾, 북한의 중국 위안화 선호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양문수, 「북한의 달러화 현상 : 실패와 평가」,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의 미래』, 북한연구학회, 2012, p. 82 참조.
12) 데일리NK, 2011. 11. 30
13) 연합뉴스, 2012. 9. 27

〈북한 시장의 중국 위안화 환율 추이〉

(단위 : 북한원)

	2010.10	2011.10	2012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안화	230~240	500~510	732.5	827.5	1,025	1,013	1,013	1,238	1,313

자료 : NK 지식인연대, 민간단체 종합

주 : 1) 2012년 가격은 평양, 평성, 원산, 해산의 평균

2) 국정 환율이 아닌 시장 환율임

긍정적 평가

첫 번째 긍정적 평가는 5차 화폐 개혁을 통해 재정 수입 기반을 일정 부분 개선했다는 점이다. 2009년 화폐 개혁으로 외화 사용 금지 조치, 구 화폐 회수, 신 화폐 발권 등으로 북한 당국의 재정이 상당 부분 확충되었는데, 지난 2010년 1월 화폐교환을 통해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발표¹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화폐 개혁 이후 북한의 예산은 2009년 36.6억 달러에서 2010년 52.4억 달러로 2011년에는 58.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재정규모 변화〉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예산	25	29	30	32.2	34.7	36.6	52.4	58.4
전년대비 증가율	-	16	3.5	7.3	7.7	5.5	43.2	11.5

자료 :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두 번째 긍정적 평가로 5차 화폐 개혁을 통해 대내 경제조직 및 법제정비가 이뤄졌다. 2009년 화폐 개혁을 주도한 군부의 세력 약화에 따라 경제권이 내각으로 이관되고 있어 내부 경제개선 추동력이 증대¹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군부가 운영하던 외화벌이 회사들을 내각으로 이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각

14) YTN. 2010. 1. 23 (북한 사회과학원 김철준 경제연구소장은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다음의 내용을 언급함.)

주도의 2002년 7.1조치의 주역인 박봉주, 광범기 前 내각 부총리의 재임용을 통해 경제개선조치의 가능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내각의 권한 확대를 위해 최근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의 해임을 비롯해 노동당 38, 39호실을 해체한 후 내각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⁶⁾.

한편, 북한은 화폐 개혁 실시 2년 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인 2011년 말 경제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14개 법제를 집중적으로 제·개정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전격적인 외국인투자법령 정비는 2009년 화폐 개혁의 부정적 영향 해소와 2012년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과 최영림 내각 총리도 2012년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경제무역지대개발과 합영·합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¹⁷⁾. 경제특구법의 경우 북·중 라선경제무역지대 및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 계획 요강에 따라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한 활로 모색이 핵심으로 평가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주요 특징〉

	주요 내용
통신·통행 자유화	- 우편, 전화, 팩스 자유로운 이용 등
보상 및 안전보장	- 재산 국유화 금지 : 거둘 시 사전통지와 효과 있는 보상
개성공단 구조 도입	- 독립성을 위해 독자적 관리위원회 신설, 타 기관 관여 금지 - 개발기업 전체 토지 임대 및 종합개발 가능
투자범위 확대	- 법인, 개인, 경제조직 투자대상자 확대
토지사용혜택	- 토지, 건물 :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가능 - 토지임대기간 50년까지 확대 - 토지, 건물 : 소유권 취득 가능
세제 등 금융 혜택	- 소득의 송금, 투자재산 반출 제한 없음

15)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2012. 11. 9, '사회주의 부귀영화 : 우리식 경제 부흥의 방도'

16) 일본 교도 통신, 2012. 1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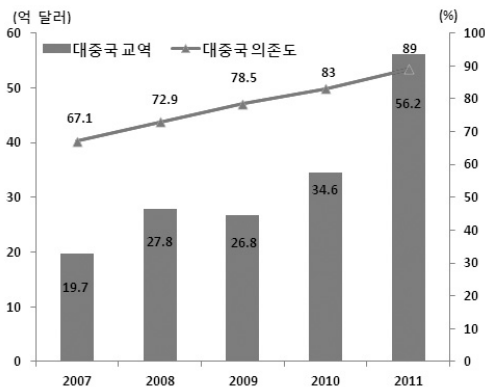
17)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경우 발언록(2012. 1. 28)에서, 최영림 내각 총리의 경우 2012년 과업 보고(2012. 4. 13)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음.

| 논 단 |

세 번째 긍정적 평가로 중국과의 특구공동개발, 외자유치와 북·중 무역 확대 등 개방 노력이 증가된 점이다. 북한은 남북경협의 정체 속에서도 부족한 물자 공급과 물가안정 등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해 북·중 경협 확대와 특구개발 노력 강화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투자를 포함한 라선, 황금평 특구 공동 개발 등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개방의 토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중 무역액은 2009년 26.8억 달러에서 2011년 56.2억 달러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대중국의존도도 같은 기간 78.5%에서 89.0%로 증가했다. 한편 중국의 대북투자도 2010년까지 누적된 직접투자금액이 2억4천만 달러에 이르며, 2009년 화폐 개혁 이후 급증하여 2011년 한 해에만 5천 595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2년 북한의 7.1조치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 개발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09년 북한의 화폐 개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 1,214만 달러에서 2011년 5,595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북중 교역액 추이〉



자료 : KOTRA

〈최근 5년간 중국의 대북한 투자 추이〉

(단위 : 만달러, %)

연도	연도별 신규투자	전년대비 증가율
2007	1,840	66.4
2008	4,123	124.1
2009	586	-85.8
2010	1,214	107.2
2011	5,595	360.9

자료 : 중국 상무부, 「2010年度中國對外直接 投資統計公報」 및 CEIC

향후 전망과 시사점

향후 북한은 5차 화폐 개혁 이후 공급 능력 확충을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 외자유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개혁·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북한은 농업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인 '6.28방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전에 비해 개혁·개방 가능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6.28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내·외신의 정보에 따르면 협동농장의 분조규모 축소, 작물 처분권 확대 등의 농업개혁을 비롯해 금융, 외자유치 등도 포함된 광범위한 개혁조치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의 속도와 폭은 북한의 경제 상황과 남북관계, 국제사회 여건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의 북핵위기와 이에 따른 긴장고조 상황 속에서 개혁·개방의 속도는 늦춰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2013년 신년사를 통해 인민경제 활성화를 이미 천명한바 있어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무기한으로 늦출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이 시점에 우리는 남북 간 긴장고조와는 별개로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노력을 사전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대선공약과 통일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을 비롯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은 남북 간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의 대화 시도가 요구된다. 대화를 통해 우선 신뢰 회복을 실시하고, 남북 간 현안문제인 5.24대북조치,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확립하고 남북한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는 북한 경제 회복 지원과 공급능력 확충으로 개혁·개방 확대에 대한 여건 조성 and 남북관계 개선에도 보탬이 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남

북한 농업과 경공업 분야의 협력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물가 안정은 물론, 남한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남·북·중 혹은 남·북·러의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공동으로 나선과 황금평 등의 경제 특구 개발과 훈춘 및 청진항 등의 대규모 물류기지 건설 등과 함께, 남·북·러 가스관 및 송전망 연결 등의 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